

보도일시

2025.5.27.(화)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단장: 김현, 부단장: 양문석, 김동아)

김문수 캠프의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 정황...93건 고발 조치

- 김문수 캠프 운영 단체방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포 적발
- 이재명 후보 자녀 관련 허위사실 등 반복 유포 ... 악의적 음해행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김문수 캠프가 운영 또는 연계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된 악의적 허위정보 93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선거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또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치밀한 유포 행위일수록 더욱 엄정히 다루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고발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재명 집권 후 대규모 숙청’ 음모론 관련 기사 유포 (72건)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관계자는 물론, 이를 반복 유포한 행위자들을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 ‘입시비리 고려대 부정입학’ 및 ‘천화동인 직원설’ 카드뉴스 유포 (21건)

입시비리 건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착오’임을 인정한 바 있는 허위사실이고, 천화동인 직원설 건은 2023년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임이 확인된 허위사실을 재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에 해당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김문수 캠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유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단 한 건도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허위로 국민을 현혹하고, 공포와 불신을 조장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끝)